
현안 보고
대외비

통일외교사회정책실
연구위원 이윤식

이재명 정부 1년 국방 평가 : 국방 개혁인가 vs. 안보 해체인가

2026년 6월 15일

이재명 정부 1년: 국방 개혁인가 vs. 안보 해체인가

2026. 6. 15. (월) 통일외교사회정책실장 이 윤 식

-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 중인 일련의 국방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선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안보체계 전반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 중
 - 정부는 문민통제 강화, 병력구조 개편, 과학화 경계, 조직 효율화 라는 명분 하에,
 - △GP 병력 감축 및 AI 경계체계 확대 △방첩사 해체 △병사 계급체계 개편 △육·해·공 사관학교 통합 △9·19 군사합의 복원 움직임 등을 추진·검토하고 있음
- 문제는 이런 조치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, 경계망·지휘망·억제망·정보망·훈련망·장교 양성체계를 동시에 재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
 - 현재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와 미사일 전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고, 중러 역시 군사협력과 정보전을 확대하고 있어 동북아 안보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
 - 그럼에도 정부는 전투력 강화보다 조직 개편과 정치적 상징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
- 국방개혁은 필요하지만 그 목적은 전투력 증대와 억제력 강화에 포커싱 되어야 함
 - 문민통제 역시 강한 군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원칙이지 군사 전문성과 전투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음
 - 국가 안보에는 '되돌리기' 버튼이 없으며, 안보 공백은 사후 보완으로 회복하기 어려움
 -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군의 힘을 약화시키는 조직 개편이 아니라, 강군 육성과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임

I. 문제 제기

-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간 추진된 국방개혁은 단순한 정책 조정 차원을 넘어서
 - 문민통제, 병력구조 개편, 과학화 경계, 남북 긴장완화, 조직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대한민국 안보체계의 핵심 축인 경계망·지휘망·억제망·정보망·훈련체계 등을 동시에 흔들고 있기 때문
- 인구절벽, 병역자원 감소, 미래전에 대응하기 위해 군 구조를 효율화하고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국방개혁은 분명 필요한 과제
 - 그러나 문제는 개혁의 방향인데, 그 최종 목적이 군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있어야 함
 - 문민통제 역시 군사전문성을 무력화하는 수단이 아니라, 강한 군대를 헌법과 민주주의적 질서 안에서 통제하기 위한 장치여야 함

-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조치들은 ‘강군 육성’보다 군 조직 재편을 통한 ‘군의 힘빼기’ 자체에 매몰되어 있음
 - △GP 병력 감축과 AI 경계체계 확대, △병사 계급체계 단순화, △전작권 전환, △방첩사 해체, △육·해·공 사관학교 통합, △9·19 군사합의 복원 등이 대표적
 - 이는 각각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지만, 종합하면 군의 경계·지휘·억제·정보·훈련 역량을 동시에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
- 무엇보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, 지금은 군을 실험할 시점이 아님
 -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했고, 전술핵 투발수단과 단거리 탄도미사일, 초대형 방사포, 순항미사일 등 대남 공격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중
 - 이런 시점에 군의 핵심 기능을 동시에 흔드는 것은 전략적 자해행위에 가까움
- 안보에는 ‘되돌리기’ 버튼이 없다는 걸 유념해야 함
 - 경계·지휘·방첩·훈련체계에 공백이 생기면 그 피해는 사후 보완으로 회복 불가하고, 안보 실패는 한 번의 공백으로도 국가 생존과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
 - 이에 본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이 대한민국 군을 강하게 만들고 있는 지, 아니면 문민통제를 명분으로 안보체계의 핵심 기반을 해체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고자 함

II. 이재명 정부 국방개혁의 실체

-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‘문민통제 강화’와 ‘군 구조 혁신’을 핵심 기조로 제시하며, 군 조직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추진 중
 - 2026년 4월, 안규백 장관은 GOP 병력을 현재 약 2만2천 명에서 6천 명 수준까지 감축하고 AI·드론 기반 경계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힘
 - 최근에는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(6.9)하고 기능을 분산하는 개편안을 발표, 또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육·해·공군 사관학교 통합, 병력·교육체계 개편,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등 국방개혁 과제를 검토
- 이러한 정책들은 각각 별개 사안처럼 보이지만 공통된 방향성을 갖고 있음
 - 전투력 증강과 전쟁수행능력 강화보다 조직 개편과 제도 변화에 집중. 즉, 군의 핵심 기능을 확대하기보다 축소·분산·통합하는 방식의 구조개혁
 - 결과적으로 경계체계·방첩체계·장교양성체계·훈련체계 전반에 동시다발적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

- 일각에선 ‘군사적 효율성’보다 ‘정치적 상징성’이 앞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
 - 정부가 제시한 ‘문민통제’, ‘군의 중립성’ 등은 민주 국가에서 필요한 원칙이지만, 군의 본질적 임무인 국가방위와 전투준비태세 유지보다 우선될 수는 없음
 - 미국·영국·프랑스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도 문민통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과 전문 직업군 체계를 발전시켜 왔음
 - 이렇게 볼때 민주적 통제와 군사적 전문성은 상호 보완 관계이며, 군사전문성과 전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문민통제는 군 조직의 약화로 이어짐
- 결국 이재명 정부 국방개혁이 비판받는 것은 개혁 유무가 아니라 그 ‘방향성’ 때문
 - 즉,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와 대남 공격능력 강화를 지속 중인데, 우리는 경계·방첩·훈련·장교 양성 등 군의 핵심 기능과 조직을 재편하는 실험을 진행
 - 이것이 과연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개혁인지, 군의 힘을 약화 내지 해체 시키려는 개혁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
 - 국방개혁의 최종 기준은 정치적 상징성이나 조직 효율성이 아니라,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전투력과 억제력 강화가 되어야 함

III. 대한민국 안보체계 5대 축의 동시 약화

① 경계망 약화 : AI가 병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

- 정부는 병력 감소 대응 차원에서 GOP 병력을 현재 2만2천 명에서 6천 명까지 감축하고 AI·드론 기반 과학화 경계체계로 전환 방안을 추진 중
- 물론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, 기술이 병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위험한 발상
 - DMZ 일대는 산악지형·악천후·전파교란 등 변수로 인해 최종 경계는 여전히 인간의 판단과 대응에 의존
 - 과거 노크귀순, 해엄귀순, 철책 월북 사례에서 보듯이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병력과 즉각 대응능력
- 결국 과학화 경계는 병력 보완 수단일 뿐, 병력 자체 대체 수단일 수는 없음

② 지휘망 혼선 : 계급체계 개편이 가져올 부작용

- 정부와 여권에서는 병사 계급체계 단순화와 군 조직문화 개편을 지속 검토
- 그러나 군은 일반 조직과 달리 명확한 위계와 책임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전투조직으로, 계급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경험·책임·지휘권의 기준

- 따라서 성급한 개편은 전투력 향상보다 지휘체계 혼선과 군기 약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

③ 억제망 균열 : 북핵 대응은 말이 아닌 압도적 능력으로

- 북한은 이미 핵무력 헌법화와 전술핵 운용체계를 구축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음
- 그러나 정부여당은 전작권 조기 전환과 자주국방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
 - 전작권 전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, 충분한 조건 충족 이전에 정치적 일정에 맞춰 추진될 경우 억제력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임
- 북핵 위협의 대응은 선언적 자주국방이 아닌 실질적 확장억제 강화가 필요

④ 정보망 해체 : 방첩사 해체가 남길 안보 공백

- 6.9(화) 국방부는 군의 정치개입 차단과 문민통제 강화를 이유로 제시하며,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분산 방안을 공식 발표¹⁾
- 그러나 방첩은 정보수집·분석·수사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효과를 발휘하는 분야로, 북한·중국 등의 하이브리드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첩기능 분산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음
 - 군사기밀 유출, 산업스파이, 사이버 침투, 여론공작 등 복합 위협은 오히려 증가 추세
- 정보기관의 실패는 대부분 정보 부족보다 정보 단절에서 발생. 즉, 기능 분산은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보 공백을 확대할 가능성

⑤ 훈련망 위축 : 〈9·19 군사합의〉의 그림자

- 정부·여권 일각에서는 남북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이유로 〈9·19 군사합의〉 복원 필요성을 제기
 - ※ 〈9·19 군사합의〉는 비행금지구역 설정, 접경지역 실사격 제한, 정찰 제약 등을 포함
- 문제는 해당 합의가 유지되던 기간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, 탄도미사일 개발, 무인기 침투를 지속했다는 점
- 결과적으로 북한은 무장을 강화했고 한국군은 훈련을 제한받았다는 비판이 제기. 즉, 평화는 합의문이 아니라 압도적 대비태세 위에서 유지되는 것

1) 국방부, 「군 방첩체계 개편방안」 발표, 2026.6.9.

<표 1> 이재명의 국방 개혁이 안보체계 5대 축에 미칠 문제점

안보 체계	정부 개혁 방향	예상 문제점
경계망	GP 병력 감축·AI 경계	DMZ 경계태세 약화 및 공백 우려
지휘망	계급체계 단순화	군기강 약화 및 지휘체계 불안정
억제망	전작권 조기전환	북핵 및 연합억제력 약화 우려
정보망	방첩사 해체	대공·방첩 역량 공백 발생
훈련망	9·19 복원 움직임	실전훈련 위축 및 전투준비태세 약화

IV.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의 문제점

- 최근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는 육·해·공 사관학교를 통합하거나 합동군사대학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 중²⁾
 - 명분은 △합동성(Jointness) 강화, △예산 절감, △병력 감소 대응 등임
 - 미래 전장에서 합동작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나, 이를 이유로 사관학교 자체를 통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
- 사관학교는 단순 교육기관이 아니라 각 군의 역사와 전통, 정체성을 계승하는 핵심 기반. 특히, 사관학교는 장교단의 정체성과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일반 대학의 통폐합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
 - 육군은 지상전, 해군은 해양작전, 공군은 공중전이라는 서로 다른 작전환경과 교리를 발전시켜 왔음
 - 장교 양성 역시도 단순한 학문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해당 군의 전통과 가치, 그리고 리더십을 체득하는 과정
 - 따라서 수십 년간 축적된 각 군의 전문성을 획일적 통합체제로 흡수하는 것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
- 무엇보다 합동성 강화와 사관학교 통합은 동일한 개념이 아님
 - 미국·영국·프랑스 등 군사 선진국들도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나, 독립적인 장교 양성체계는 유지하고 있음
 - 합동성은 교육·훈련·작전 단계에서 강화해야 하는 것이지 사관학교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음. 오히려 장교 양성 단계부터 획일화가 이루어질 경우 각 군 고유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약화될 우려가 큼

2) 국방부, “국방개혁 관련 공개자료 및 언론보도 종합 분석”, 2026. 6월.

- 특히 북핵·미사일 위협과 복합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건 ‘전문성 강화’임
 - 미래 전장은 육·해·공·우주·사이버 영역이 결합되는 다영역작전(Multi Demension Operation) 체계로 발전하고 있음
 - 이러한 환경일수록 각 군의 전문 역량은 더욱 중요해짐. 즉, 전문성 위에서 합동성을 구축해야지, 전문성을 희생하여 합동성을 추구해서는 안 됨
- 결국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대한민국 장교 양성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
 - 사관학교는 군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동시에 국가 안보를 책임질 핵심 리더를 육성하는 시스템
 - 장교 양성체계의 목적은 예산 절감이나 조직 통합이 아니라 강한 군대를 이끌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음
 - 따라서 육·해·공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조직 효율성이나 정치적 상징성보다 군의 전문성과 전투력 유지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함

V. 결론 : 국방개혁을 가장한 안보 해체의 위험성

- 이재명 정부 국방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개별 정책이 아니라 여러 핵심 안보체계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는 점임
 - △경계망, △지휘망, △억제망, △정보망, △훈련망, △장교 양성체계가 사실상 같은 시기에 재편되고 있음
 - 각각 정책은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나, 여러 체계를 동시에 흔들 경우 예상하지 못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
 - 특히 안보는 개별 정책의 성공 여부보다 전체 체계의 안정성이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큰 상황
- 무엇보다 안보는 일반 정책과 달리 실패를 수정할 기회가 매우 제한적임
 - 경제정책은 실패하더라도 재정 투입이나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일부 수정이 가능
 - 그러나 안보 실패는 단 한 번의 공백만으로도 국가 생존과 국민 생명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
 - 이에 국방개혁은 속도보다 안정성과 검증, 정치 명분보다 전투력이 우선되어야 함
- 아울러 지금은 군 구조를 대대적으로 실험할 시기가 아님
 -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고 전술핵 운용능력과 미사일 전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고, 중국과 러시아 역시 군사협력과 정보전, 하이브리드전을 확대하며

동북아 안보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음

- 이처럼 다면적 안보 위협이 감소하는 시기가 아니라 증가하는 시기에 군의 핵심 기능을 동시에 재편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매우 큼

○ 따라서 강한 군대를 만드는 개혁과 군의 힘을 빼는 개혁은 구분되어야 함

- 국방개혁의 목적은 정치적 상징성이 아닌 전투력 강화와 억제력 확보에 있어야 함
- 문민통제 역시 강한 군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원칙이지 군의 전문성과 전투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님
- 군의 조직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군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것이며, 개혁의 성패 역시 전투력 증감 여부로 평가받아야 함

○ 결국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은 개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넘어 대한민국 안보체계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

-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군 조직의 해체가 아니라 강군 육성이고, 정치적 상징성이 아니라 확고한 억제력이며, 조직 재편이 아니라 전투력 강화임
- 국방개혁의 목적은 군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있어야 하며, 북한이 핵무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군의 근간을 흔들면 안됨
- 결론적으로 안보에는 '되돌리기' 버튼이 없으며, 지금 필요한 것은 실험이 아니라 강한 군대와 확고한 안보태세임